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양승춘 · 김진화* · 최창욱*

농촌진흥청 지도기획과

*서울대 농생대

A Study on the Development Directions for Upbringing Young Success Farmers

Seung Choon Yand · Jin Hwa Kim* and Chang Wook Choi*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College of Agriculture & Life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ummar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development directions for upbringing young success farmers. The study was carried out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questionnaire survey. Total of 400 young success farmers were surveyed to collect data, and 394 responded.

For development directions of upbringing young success farmers, this study suggests; 1) to increase investment of agricultural management and marketing, 2) to postpone the time to payback and to lower the loan rates, 3) to enlarge consulting service in agricultural extension organizations.

I. 서 론

고도의 산업화 사회에서 농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업부문에 종사할 젊고 유능한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또한 국내외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국제경쟁력의 확보를 필요로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농업 후계세대의 양성이 농업발전의 우선요소라 볼 수 있다.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농촌은 농가인구의 급격한 감소, 특히 이농, 노령화, 부녀화의 문제로 인하여 농업후계세대 양성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농업후계세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1981년부터 농업

인후계자 육성사업을 실시하여 오고 있다.

농업인후계자 사업은 농업후계세대의 안정적인 확보와 농촌사회의 활력화에 크게 공헌하였으나(양승춘 외, 1997), 사업 추진의 과정에서 농업인들이 느끼는 요구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한층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사업의 결실을 더욱 알차게 맺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의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의 현황을 고찰하고, 농업인후계자가 인지하고 있는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의 문제점과 요구를 파악하여, 앞으로의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그 목

적이 있다.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고찰과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문헌고찰을 통해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통한 조사내용은 영농지속의사와 농업전망, 정부 정책과 자신의 사업에 대한 평가,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와 경영 애로사항, 후계자의 선정과 지원, 컨설팅제도에 대한 의견 등이다.

자료조사는 1998년 10월~11월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농업인후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 총 400매 중 394매를 연구에 이용하였으며 지역별 자료의 수는 강원 31매, 경기 50매, 경남 49매, 경북 59매, 전남 65매, 전북 45매, 충남 65매, 충북 30매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WIN 패키지를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II.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의 현황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은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소년들을 적극 지도하여 농업에 대한 적성과 능력을 높이고, 영농 사업기반 조

성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립 영농 정착을 촉진시켜 유능한 농업 전문인력의 체계적 확보, 유지를 도모할 목적으로 1981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양승춘 외(1997)가 제시한 것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농업인후계자 지원 대상자격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중 편입된 날로부터 복무기간이 2년이상 경과된 자와 예비후계자로 등록된 자로서 40세 미만으로 병역필 또는 면제자와 여성 또는 생산자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자중 품목별 생산자 단체장이 추천한 자로서 40세 미만으로 병역필 또는 면제자와 여성,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직업군인중 전역 희망자로서 40세미만인 자 등이다. 농업인후계자 육성자금은 본인들의 영농설계에 따라 20~50백만원까지 차등지원되며 연리 5%, 5년거치 5년 균분상환(10년)을 조건으로 지원되고 있다.

분야별 지원대상사업은 <표 1>과 같이 경종 농업분야와 축산분야로 구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주로 농지구입이나 해당작목의 시설물 설치 및 농기계구입 등에 제한하여 사업자금을 사업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유도하고 있다.

<표 1>

농업인후계자 분야별 지원대상사업

분야별	사업작목	지원대상사업내역
경종농업 분야	수도작, 원예(채소, 화훼 등),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농지구입, 고정식온실, 하우스 시설, 수경재배시설, 과원조성, 묘목 구입, 벚섯재배사, 저장시설, 관수시 설, 대형농기계, 컴퓨터 구입, 기타 농업기반시설
축산분야	한(육)우, 낙농, 양돈, 기타 축산	축사 신축 및 시설개선, 가축입식, 폐수처리시설, 초 지 조성, 사료포 조성, 대형농기계, 사료저장시설, 컴 퓨터 구입, 기타 축산기반시설

자료 : 양승춘 외(1997), 농업전문인력 육성사업의 현황과 발전과제, 한국농촌지도학회지, 제4권 제1호, pp. 283-292.

농업인후계자의 선정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읍·면장이 읍·면 산업계장 또는 부읍면장, 농촌지도소장이 지정하는 읍·면 담당 농촌지도소 공무원, 농·축협 등 관련 융자취급기관 임직원 및 선도농가 3인 등 총 6인 내외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영농경력, 영농기반 등을 평가한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지도소장에게 통보하고 농촌지도소장은 분야별 전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평가한 후 지원대상자 우선 순위 및 지원금액을 정하여 적격자를 시장·군수에게 추천한다. 한편, 시장·군수는 농촌지도소장과 협의하여 지역내 농업인후계자 사업자금 지원 대상자의 심사·추천이 가능한 품목별 생산자단체가 존재하고 이들 단체에 심사·추천권을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품목별 생산자단체에 지원대상자 심의·추천권한을 부여하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 품목별생산자단체장은 지원대상자를 심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추천하고 농촌지도소장에게 통보한다.

시장·군수는 농촌지도소장과 품목별 생산자단체장이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시·군농어촌

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여 관련기관에 통보함으로써 농업인후계자 육성자금 지원대상자의 선발이 완료된다.

농업인후계자로 선발된 자는 농촌지도소에서 실시하는 영농정착에 필요한 각종 지원 및 행정절차 등에 관한 공통교육과 분야별 영농기술교육을 받아야만 한다. 영농기술교육에 관하여 제반사항은 농촌지도소장이 현지여건, 농업인후계자 희망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고 있다.

농업인후계자가 성공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가 사후관리를 총괄하고 있으며 사업계획서상의 추진경도와 경영실태 조사 등은 농촌지도소장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시군농촌지도소의 제한된 인력으로 매년 선발되는 농업인후계자와 기존의 후계자 전체를 대상으로 경영실태를 조사하고 사업계획의 추진정도를 세밀하게 점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이다.

농업인후계자는 1981년 이후 1998년까지 총 105,031명을 선정 육성하고 있다. 구체적인 연도별 육성인원과 지원금액 및 1인 평균 금액은 <표 2>에서 알 수 있다. 1998년 총 육성인원은 7,862명이며 지원금액은 2,400억원에 달한다.

<표 2>

농업인후계자 육성인원 및 지원금액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합 계	'81~'94	'95	'96	'97	'98
육성인원	105,031	70,686	9,730	8,227	8,526	7,862
지원금액	1,601,630	768,283	185,000	181,275	227,072	240,000
1인 평균	15.2	10.9	19.0	22.0	26.6	30.5

자료: 농촌진흥청(1998), 농촌진흥청 내부자료.

III. 농업인후계자 사업에 대한 조사결과 분석

1. 조사대상 농업인 후계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 농업인 후계자의 일반적인 특성

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은 남자 386명(98.0%), 여자 8명(2.0%)이었고, 연령은 40대가 181명(45.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30대로 181명(39.8%)이었다. 농업소득은 2,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가 179명(45.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2,000만원 이하 81명

<표 3> 조사대상 농업인 후계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자	386	98.0
	여자	8	2.0
연령	20대	26	6.6
	30대	157	39.8
	40대	181	45.9
	50대 이상	30	7.6
학력	중졸	144	36.5
	고졸	196	49.7
	초·대졸	54	13.7
농업소득	2,000만원 이하	81	20.6
	2,001 ~ 4,000만원	179	45.4
	4,001 ~ 6,000만원	63	16.0
	6,001 ~ 8,000만원	41	10.4
	8,001만원 이상	30	7.6
지원작목	수도작	99	25.1
	복합영농	41	10.4
	원예·특작	159	40.4
	축산	95	24.1
영농유형	전업	266	67.5
	농업>농외소득	111	28.2
	농외<농업소득	17	4.3
지역	강원	31	7.9
	경기	50	12.7
	경남	49	12.4
	경북	59	15.0
	전남	65	16.5
	전북	45	11.4
	충남	65	16.5
충북	30	7.6	
영농경력	10년 이하	70	17.8
	11년 ~ 20년	207	52.5
	21년 ~ 30년	103	26.1
	30년 이상	14	3.6
계		394	100.0

(20.6%), 4,000만원 초과 6,000만원이하 63명 (16.0%)의 순이었다.

지원작목을 보면 원예·특작이 159명(40.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수도작 99명 (25.1%), 축산 95명(24.1%)의 순이었다. 영농유형은 전업이 266명(67.5%)으로 가장 많았고, 농업소득 > 농외소득(1종겸업)이 111명(28.2%), 농업소득 < 농외소득(2종겸업)이 17명(4.3%)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전남과 충남이 각각 65명(16.5%)으로 가장 많았으나 비교적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하였다. 영농경력별로는 11년에서 20년이 207명(52.5%)으로 가장 많았고, 21년에서 30년

이 103명(26.1%), 10년 이하 70명(17.8%), 30년 이상 14명(3.6%)의 순으로 나타났다.

2. 농업인후계자의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관련 의사

1) 영농지속의사와 농업의 전망

영농지속의사와 농업의 전망에 관한 설문 의 결과는 <표 4>와 같다. 먼저 영농지속의사를 보면 '계속해서 영농에 종사하겠다'가 363명으로 전체의 92.1%를 차지하였으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전업하겠다'가 25명으로 6.3%를 차지하였다.

<표 4> 영농지속과 농업전망에 대한 의사

구	분	빈	도	백	분	율
영 농 지 속	계 속 종 사	363		92.1		
	기 회따라 전업	25		6.3		
	이 농 예 정	2		0.5		
	잘 모 름	4		1.0		
	계	394		100.0		
농 업 전 망	매 우 발 전	52		13.2		
	조 금 발 전	181		45.9		
	그 저 그 령 다	116		29.4		
	퇴 보	45		11.4		
	계	394		100.0		

앞으로 우리 나라의 농업전망에 대해서는 '조금 발전할 것이다'가 181명으로 전체의 45.9%를 차지하였고, '그저 그럴 것이다'가 116명으로 전체의 29.4%, '매우 발전할 것이다'가 52명으로 13.2%, '퇴보할 것이다'가 45명으로 전체의 11.4%를 차지하였다. 전체의 약 60% 정도가 우리 나라의 농업이 발전할 것으로 보았다.

2) 정책과 사업

정부의 농업인후계자 정책과 본인의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는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다. 정부의 농업인후계자 정책에 대해서는 전체의 42.6%(168명)이 '그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비교적 성공 및 매우 성공했다'는 응답은 전체의 33.2%(131명)였으며, 약간 실패 및 아주 실패는 24.1%(95명)를 차지하였다.

한편, 농업인후계자 본인의 개인 사업에 대

〈표 5〉 정책과 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

구	분	빈	도	백	분	율
정부의 후계자 정	매우 성공	10		2.5		
	비교적 성공	121		30.7		
	그저그렇다	168		42.6		
	약간 실패	84		21.3		
	아주 실패	11		2.8		
	계	394		100.0		
본인의 사업	매우 성공	31		7.9		
	비교적 성공	201		51.0		
	그저그렇다	114		28.9		
	약간 실패	38		9.6		
	아주 실패	10		2.5		
	계	394		100.0		

한 평가에서는 ‘매우 성공 및 비교적 성공’에 응답한 사람은 232명으로 전체의 58.9%, ‘그저 그렇다’가 114명으로 전체의 28.9%, ‘약간 실패 및 아주 실패’는 48명으로 12.1%를 차지하였다.

3)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와 경영 애로사항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 중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과 농업경영시의 어려운 사항 그리고 특별히 교육 및 상담을 필요로 하는 분야는 〈표 6〉과 같다. 중점분야는 농산물 유통 및 판매지원이 194명(49.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사업자금 추가지원 108명(27.4%)이었다.

농업경영시의 어려운 사항은 농수산물의 가격불안정이 227명(57.6%)으로 가장 많았고, 영농기반 및 자금부족이 100명(25.4%)으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특별히 교육 및 상담을 필요로 하는 분야는 재배 및 사양기술이 100명(27.9%), 경영기법 92명(23.4%), 판매활동 89명(22.6%)의 순이었다. 대체로 농업인 후계자들은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영농자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4) 앞으로의 후계자 선정과 지원

앞으로의 후계자 선정과 지원, 지원자금의 적정규모, 후계자 사업과 전업농 사업의 통합, 예비후계자 제도, 지원자금의 상환기간, 우선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은 〈표 7〉와 같다.

후계자 선정과 지원에서는 전체의 62.2%인 245명이 선정인원을 축소하고, 자금을 확대하는 데 응답하였다. 지원자금의 적정규모는 4천만원에서 5천만원이 112명(28.4%), 7천만원 이상이 111명(28.2%), 5천만원에서 7천만원 미만이 103명(26.1%)으로 전체의 80% 이상이 4천만원 이상에 응답하였다.

후계자 사업과 전업농 사업의 통합에 대하여는 통합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244명으로 전체의 61.9%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통합에 반대하는 사람은 127명으로 전체의 32.2%에 해당한다. 또한, 예비후계자 제도에 대한 의견에서는 불필요에 152명(38.6%), 필요 144명(36.5%), 필요하나 제도개선이 필요 85명(21.6%)로 전체의 약 58%가 예비후계자 제도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한편, 지원자금의 상환기간에 대하여는 전체

〈표 6〉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와 경영 애로사항

구	분	빈	도	백	분	율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	• 사업자금 추가 지원	108		27.4		
	• 영농기술경영교육 및 상담	52		13.2		
	• 농산물 유통 및 판매 지원	194		49.2		
	• 품목별 생산자조직 육성	38		9.6		
	• 기 타	2		0.5		
	계		394		100.0	
농업경영시 어려운 분야	• 영농기반 및 자금부족	100		25.4		
	• 노동력 확보 곤란	22		5.6		
	• 영농기술 및 경영기술 부족	17		4.3		
	• 농수산물 가격 불안정	227		57.6		
	• 농산물 판로 불확실	27		6.9		
	• 기 타	1		0.3		
계		394		100.0		
교육 및 상담 필요 분야	• 재배 및 사양기술	110		27.9		
	• 경 영 기 법	92		23.4		
	• 농기계, 시설 관리	36		9.1		
	• 컴 퓨 터 이 용	54		13.7		
	• 회 계 관 리	10		2.5		
	• 판 매 활 동	89		22.6		
• 기 타	3		0.8			
계		394		100.0		

의 54.8%인 216명이 짧다고 응답하였고, 적당하다가 42.4%(167명), 길다가 2.8%(11명)의 순이었다. 후계자 육성자금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는 전체의 42.4%인 167명이 융자금리의 인하를 들었고, 25.9%인 102명이 지원자금의 확대를 22.3%인 88명이 융자기간의 확대를 들었다.

5) 컨설팅 제도

컨설팅 제도에 대한 의견은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다. 컨설팅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 182명(46.2%), 매우 필요 144명(36.5

%)로 전체의 약 82%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컨설팅시 비용지불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는 경우 지불이 242명(61.4%), 당연히 지불이 78명(19.8%)로 전체의 약 81%가 비용지불에 대하여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

한편, 컨설팅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생산기술 118명(29.9%), 경영기술 111명(28.2%), 농산물 유통 및 저장 108명(27.4%)의 순이었고, 컨설팅을 받고 싶은 전문기관에 대하여는 농촌지도기관 170명(43.1%), 시험연구기관 127명(32.2%), 민간전문업체 80명(20.3%), 대학교수 15명(3.8%)의 순이었다.

<표 7> 앞으로의 후계자 선정과 지원

구	분	빈	도	백	분	율
후 계 자 선 정 · 지 원	현행 1만명 유지	60		15.2		
	선정인원축소/자금확대	245		62.2		
	선정인원확대/자금축소	12		3.0		
	선정인원확대/자금확대	77		19.5		
	계	394		100.0		
지 원 자 금 적 정 규 모	3천만원 미만	26		6.6		
	3천만원~4천만원 미만	42		10.7		
	4천만원~5천만원 미만	112		28.4		
	5천만원~7천만원 미만	103		26.1		
	7천만원 이상	111		28.2		
	계	394		100.0		
후계자사업 및 전업농 사업의 통 합	통합해야 함	244		61.9		
	통합할 필요 없음	127		32.2		
	잘 모름	23		5.8		
	계	394		100.0		
예비후계자제도	필 요	144		36.5		
	불 필 요	152		38.6		
	필요하나 제도개선 필요	85		21.6		
	모르겠다	13		3.3		
계	394		100.0			
지 원 자 금 상 환 기 간	적 당 하 다	167		42.4		
	짧 다	261		54.8		
	길 다	11		2.8		
	계	394		100.0		
우 선 사 개 선 사 항	지원자금 확대	102		25.9		
	융자금리 인하	167		42.4		
	융자기간 확대	88		22.3		
	사용대출한도 확대	37		9.4		
	계	394		100.0		

〈표 8〉 컨설팅 제도에 대한 의견

구	분	빈도	백분율
컨설팅 제도의 필요성	매우 필요	144	36.5
	필요	182	46.2
	그저 그렇다	48	12.2
	불필요	15	3.8
	전혀 불필요	5	1.3
	계	394	100.0
컨설팅 시 비용 지불 의사	도움이 되는 경우 지불	242	61.4
	당연히 지불	78	19.8
	지불할 수 없음	35	8.9
	모르겠음	31	7.9
	missing values	8	2.0
	계	394	100.0
컨설팅이 필요한 분야	생산 기술	118	29.9
	경영 기술	111	28.2
	농산물유통 및 저장	108	27.4
	기타	3	0.8
	missing values	54	13.7
	계	394	100.0
컨설팅 받고 싶은 전문기관	농촌지도기관	170	43.1
	시험연구기관	127	32.2
	대학교수	15	3.8
	민간전문업체	80	20.3
	기타	2	0.5
	계	394	100.0

IV. 농업인후계자 사업의 개선방안

지금까지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에 대한 농업인의 의견을 영농지속의사와 농업의 전망, 정책과 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와 경영 애로사항, 앞으로의 후계자 선정과 지원, 컨설팅제도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영농지속의사에 있어서는 전체의 약 92%가

계속 영농에 종사할 뜻을 가지고 있었으며 앞으로의 우리나라 농업의 전망에 대해서는 약 60%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정부의 농업인후계자 정책에 대하여는 전체의 약 30%가 성공했다고 보고 있었으며, 농업인후계자 본인의 개인 사업에 대한 평가에서는 전체의 약 60%가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 중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는 농산물 유통 및 판매지원을 들었

으며, 농업경영시 어려운 사항은 농수산물의 가격불안정을 들었고, 특별히 교육 및 상담이 필요한 분야는 재배 및 사양기술과 경영기법 및 판매활동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의 후계자 선정과 지원에서는 선정인원은 축소하고, 자금은 확대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후계자 사업과 전업농 사업의 통합에 대해서는 약 62%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예비 후계자제도에 대해서는 약 58%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지원자금의 상환기간에 대하여는 반 이상이 짧다고 응답하였고, 우선 해결사항으로 융자금리의 인하를 바라고 있었다.

컨설팅제도에 대하여 약 82%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비용 지불에 대하여도 81%가 지불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컨설팅이 필요한 분야는 생산기술, 경영기술, 농산물 유통 및 저장의 순이었고, 컨설팅을 받고 싶은 전문기관은 농촌지도기관, 시험연구기관, 민간전문업체, 대학교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토대로 농업인후계자 사업의 앞으로의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첫째, 농업인후계자들이 가장 염려하고 어려워하는 농업경영 및 유통부문의 투자확대가 필요하고, 둘째, 농업인후계자 지원자금의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융자금리를 대폭적으로 인하하며, 셋째, 컨설팅제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농업인후계자

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농업인후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농촌지도기관에 대한 컨설팅 업무의 확대가 요구된다.

V. 참고 문헌

1. 김동일, 1994, 한국농촌청소년 문제의 현황과 대책, 이화여자대학교 농촌문제연구소.
2. 농림부, 1997, '97년도 농업인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사업현황.
3. 농촌진흥청, 1995, 농업전문인력 육성현황과 성과.
4. _____, 1998, 농촌진흥청 내부자료.
5. 양승춘 외, 1997, 농업전문인력 육성사업의 현황과 발전과제, 한국농촌지도학회지 제4권 제1호, pp. 283-292.
6. _____, 최영찬, 1995, 지방직화 이후 새로운 농촌지도사업의 추진방향, 한국농촌지도학회지 제2권 제2호, pp. 163-173.
7. 이영대, 정명채, 1990, 농촌인력의 체계적 육성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8. 이영석, 1987, 상업농시대의 농촌지도사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9. 최민호 외, 1988, 축산후계자 육성 및 축산정책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새마을운동 종합연구소.
10. 홍중은, 박종열, 1982, 영농후계자 육성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새마을 연구 논총 제17집 4권. pp. 243-264.